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03면	도의회 "도 감사위, 피감자 인격 존중해야"	1
江原日報	03면	도의회, 도 문화체육국 감사	2
江原日報	27면	도의회 농림수산위, 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 현지 시찰	3
강원도민일보	18면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서울 G강원푸드마켓 방문 점검	3
강원도민일보	03면	도 '이승만 일대기' 공공도서관 배부 도마 위	4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 출연기관 감사 강화해야” 지적 잇따라	5
MBC 강원영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2·3지구도 늦춰지나?[1/2]	6
KBS 춘천	온라인	강원평경연 “전자철판 사업 감사위원회가 감사해야”	8
강원도민일보	18면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강원도 일본본부 현지 감사	8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도 일본본부 현지 감사	9
철원신문	온라인	엄기호 의원 “대곡분교 폐교 부지 시급하게 처리 해야”	10
news 1	온라인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대위, 정당 방문해 총선공약 건의문 ...	11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대위, 총선공약 반영 촉구 건의문 전...	12
강원도민일보	15면	수능 이모저모	13
강원도민일보	11면	수능 이모저모	13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14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원제용 강원특별자치도의원	14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14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15
강원도민일보	14면	[동정] 심재섭 영월군의장(왼쪽)·윤길로(영월) 도의원	15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강정호(속초) 도의원	15
강원도민일보	02면	AI도 비켜가는 강원? 일자리 대체 안심지역 분류 '역설'	16
강원도민일보	13면	인제군 산림탄소 매각 2700만원 수익 창출	16
강원도민일보	01면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예타조사 장기화 되나	17
강원도민일보	02면	'산악관광·K-연어산업 메카' 양양이 뜬다	18
강원도민일보	11면	강릉 주문진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8
江原日報	05면	중·북부 산지 아침까지 최대 7cm ‘대설주의보’	19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수능 직후 수험생에 더 배려를	20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강원 광역수도권 본격화할 때	21
江原日報	25면	[사설] 경제성 중심 ‘에타’ 기준 변경 요구, 일리 있다	22
江原日報	25면	[사설] 조세 정의 위협하는 ‘악성 체납’, 용납해선 안 돼	23

2023 11 17 ()

江原日報

03

도의회 “도 감사위, 피감자 인격 존중해야”

기행위,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감찰시 새벽에 당직자 불러”

팀장 “사실 아니고 동의 구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 감사위원회를 향해 피감자 인격을 존중하며 감사할 것을 당부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16일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승순(강릉) 도의원은 “공공지자체 감찰 시, 새벽 주민센터 당직자를 불러 잠금장치 해제를 요구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지자체에서는 방문 목적도 밝히지 않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고압적이었던 제보가 있다. 감사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현식 직무조사팀장은 “밤에 당직자를 불러낸 적은 없다. (야간 감사시) 당직자 동의를 구하고, 서랍 잠금장치가 해제돼 있는지만 확인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과거에는 다툼이 있었으나 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은 “직무감찰에 나가는 담당 팀장에게 강압적으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실제 그런 사항이 있다면 감찰을 통해 잘못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

변했다. 최승순 의원은 “고압적 자세를 갖게 되면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느낀다. 상대방 인격을 존중하고 무리한 자료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 시대에 맞는 감사 자세”라고 말했다.

이날 한창수(횡성) 부의장은 “감사위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벌을 주면 또 상도 줘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고, 김길수(영월) 기획행정위원장

은 “지역 의료원이 건전재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미선(비례) 의원은 “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받을 때 감사위원장에게 상담할 수 있다. 제도 활용 방안을 고심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회문화위원회는 이날 문화체육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심오섭(강릉) 의원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와 출연금을 받는 단체 간 급여 격차가 심하다. 내년 예산안부터 형평성을 맞추라”고 강조했다.

유순옥(비례) 의원은 “강원문화재연구소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은 21명에 불과하다”며 충원을 요청했다. 원제용(원주) 의원은 도체육회 선수들의 식비가 한끼당 8,000원에 불과하다며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江原日報

2023 11 17 ()

03



도의회, 도 문화체육국 감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정재웅)가 1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강원자치도 문화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김정수(국민의힘·철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신세희기자

江原日報

2023 11 17 ()

27



도의회 농림수산물위, 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 현지 시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물위원회(위원장: 김용복)는 16일 서울에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 현지 시찰을 실시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1 17 ()

18



도의회 농림수산물위원회 서울 G강원푸드마켓 방문 점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물위원회(위원장 김용복)가 16일 서울 G강원푸드마켓 농수특산물진품센터 마포점과 강남점에 각각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제공=도의회

강원도민일보

2023 11 17 ()

03

도 '이승만 일대기' 공공도서관 배부 도마 위

도의회 문체국 행감서 경위 따져
책 100권 구입 시·군 43개소 배포
“누구 지시인지 상세히 자료 제출”



박관희

정재웅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승만 대통령 일대기' 관련 도서를 별도 구입해 도내 공공도서관에 배부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관희(춘천) 의원은 16일 도 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국 이 지난 6월 이승만 대통령 일대기를 다룬 책 '세번의 혁명과 이승만'을 도내 시·군 도서관 43개소에 배부한 경위를 따져물었다.

박 의원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세번의 혁명과 이승만' 도서물품 구입 지원 사업으로 책 100권을 구입해 배부를 마쳤다. 도는 관련 사업 결재문서에 '도민들이 근·현대사를 다양한 관점을 통해 배우고,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맞는 비전과 방향을 정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공도서관에서 필요한 것이면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문화예술과에서 (예산)항목에도 없던 도서를 구입해 배포한 것”이라며 “읽어 보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담당직원이 “읽어보지

못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내용도 모르고 예산으로 도서를 구입했느냐”며 “책의 지은이와 어떤 판단에 대해 진행됐는지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해당 도서는 2022년 4월 출간된 책으로, 오정환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자문위원이 저술했다.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도 이날 “무슨 목적으로 누구의 지시를 갖고 이뤄진 것인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김시성(속초) 의원은 강원문화재단 이주가연계증권(ELS) 파생상품에 투자한 것과 관련, “손해액으로 도민 혈세가 20억 수준”이라며 “도 담당자도 심의위에서 왜 이런 상품에 투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발언한 내용이 회의록에 있다”고 강원문화재단과 문화체육국의 책임을 따져물었다.

이에 윤승기 문화체육국장은 “당시 상황을 모르지만, 결과를 보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설화 lofi@kado.net

2023 11 16 ()



“강원도 출연기관 감사 강화해야” 지적 잇따라

앵커

오늘(16일) 강원도의회에서는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는데요.

혈세가 들어간 강원도 출연기관과 민간기업 지원 사업비 내역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행정사무감사 시작부터 강원연구원에 대한 감사 요구가 이어집니다.

올해 강원연구원 예산으로 발행된 책에 현진권 원장 등 2명의 이름만 편저자로 표시됐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류인출/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강원연구원 예산으로 책을 만들었지만, 개인이 낸 것처럼 해야 많이 읽힐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강원연구원장이) 답변하셨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올해, 강원연구원장의 업무추진비가 한 해 전보다 3배 늘었고, 국외 출장도 늘었다며 연구원 운영 전반을 점검하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동주/강원도 감사위원장 : "의원님들이 제기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한다, 안 한다'를 여기서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강원도가 혈세를 지원한 그린수소 생산사업에 대한 부실한 관리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관리가 서류 위주로만 이뤄졌다면, 현지 실사와 현지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그린수소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연구사업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동주/강원도 감사위원장 : "R&D 사업이라든지 그걸 전반적으로 한번 제도개선이 필요한건지,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행감에서 도의원들은 의료원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등 강원도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며, 감사위원회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박성은

2023 11 16 ()

MBC 강원영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2·3지구도 늦춰지나?

배연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2·3지구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 추진 방법에 대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 시행자의 의견이 엇박자를 내면서,
당초 올해 착공하려던 망상3지구 개발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는
특혜 의혹, 강원도 감사 등으로
전 사업 시행자의 지위가 취소되고,

현재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3지구에는 호텔과 리조트를 조성하는데
2지구는 현재 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고,

3지구는 실시계획 승인을 마치고
설계와 보상 작업이 추진되는 등
진척 속도가 빠른 듯 보였지만,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2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시점을 놓고
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 시행자의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배연환 기자
"이에 따라, 당초 올 연말로 예상됐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3지구 착공이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자청은 실시계획 승인까지 마친
3지구 사업이 연내 착공하면
2지구의 실시계획 승인은 이후 내줄 계획이지만

사업 시행자는
2지구의 실시계획 승인을 먼저 해줘야
금융권 대출이 용이해
3지구 개발까지 속도가 붙는다는 입장입니다.

경자청과 사업자의 엇박자에 대해
최근 강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찬홍/강원도의원
(지난 13일,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청장님의 의지와
지금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상이하죠?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1지구 개발 과정에 곤욕을 치렀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실제 사업 추진이 최우선 과제라며,

3지구 착공에 앞서
2지구 실시 계획 승인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며
입장차가 조금은 줄어든 모양새입니다.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대출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좀 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 측하고 경자청에서도 하나 하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기한이
내년 말까지로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망상 2·3지구 사업 착공 여부와 시기가
전체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배연환입니다. (영상취재 배광우)

KBS 춘천

2023 11 16 ()

강원평경연 “전자철판 사업 감사위원회가 감사해야”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오늘(16일), 성명을 내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도교육청의 전자철판 보급 사업 계획 변경과 제품 조건 추가 과정에 대한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진실 규명을 위해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영준 yjkim1@kb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11 17 ()

18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강원도 일본본부 현지 감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철)가 16일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강원도 일본본부에 방문해 현지 감사를 실시했다.

사진제공=도의회

2023 11 16 ()

江原日報

[포토뉴스]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도 일본본부
현지 감사

강



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김기철)가 16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일본본부를 방문해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2023 11 16 ()

엄기호 의원 “대곡분교 폐교 부지 시급하게 처리 해야”

－ 폐교 부지 장기 방치로 흉물화, 교육청의 시급한 대책 필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철원2)은 14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곡분교의 폐교 부지가 장기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봉주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대곡분교의 경우 철원군의 부지 매입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하고 다만, 예산 문제로 지연되고 있으나 강원도교육청과 철원군과의 기관 협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철원군의 예산 대책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엄기호 의원의 재차 질의에 전봉주 행정국장은 철원군의 예산 대책이 계속 지연될 경우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건물만이라도 철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청 정책국에 대한 행정질문에서 청소년기 학생들의 성장과 건강증진은 물론 강원 쌀 판매 촉진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각 급학교 아침 식사 제공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박옥녀 도교육청 정책국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력 총원과 예산 편성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사업 진행에 필요한 예산 등의 편성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엄의원은 강릉교육지원청이 시행하고 있는 아침 식사제공이 학생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청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타시도 출신 학생의 비율이 원주의료고, 한국소방마이스터고를 제외하고 아주 낮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이에 김은숙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교육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타시도출신 학생수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엄의원은 학과 개편 이후 원주공업고와 소양고의 경우 학생 충원율이 100%에 달한 것이 학과 개편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이 부분에 있어 교육청이 더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관리자 (korea78123@hanmail.net)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대위, 정당 방문해 총선 공약 건의문 전달



강원도의회.(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박기영 위원장·엄윤순 부위원장)는 오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힘 강원도당 사무처를 잇따라 방문해 ‘강원의 소중한 자산 소양강댐, 주권확보 법제화를 위한 총선공약 건의문’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긴급간담회를 가지고 각 도당사무처에 전달할 건의문과 총선공약 문구를 결정했다.

박 위원장은 “강원의 댐 관련 지역에서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댐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법률안 발의와 통과에 대한 서명동의 운동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양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 소속 도의원 9명과 춘천·화천·양구·인제 4개 시·군의회 의원 8명으로 구성됐다.

파이낸셜
뉴스

2023 11 16 ()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위, 총선공약 반영 촉구 건의문 전달키로



박기영 강원도의원(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장)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힘 등 각 정당 강원도당 사무처를 방문, '강원의 소중한 자산 소양강댐, 주권 확보 법제화를 위한 총선공약 건의문'을 오는 20일 전달할 예정이다.

1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긴급간담회를 갖고 각 도당사무처에 전달할 건의문과 총선공약 문구를 결정했다.

대책위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 소속 도의원 9명과 춘천·화천·양구·인제 등 4개 시군의회의 의원 8명이 참가하고 있다.

박기영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장은 “긴급간담회를 통해 각 정당의 강원지역 총선 공약에 반영해야 할 문구를 치열한 논의를 통해 건의문을 작성했다”며 “향후 강원댐 관련 지역에서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댐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법률안 발의와 통과에 대한 서명동의 운동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1 17 ()

15

수능 이모저모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신철원고 정문에는 16일 이현종 철원군수, 정문걸 교육장, 엄기호 도의원, 학부모, 동문, 재학생 등이나와 수험생들에게 핫팩, 초콜릿, 음료 등을 나눠주며 응원. <철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이 화천고 정문에 “지금군복을 입고 있지만 내년에는 꼭 대학 새내기가 돼 미래의 꿈을 설계할 계획”이라는 포부를 밝힌 한 장병이 있어 눈길. 해당 장병을 비롯 육군 2군단 소속 장병 175명은 이날 군단의 배려로 수능을 봄. 수능 시험장인 화천고에 최문순 화천군수도 아침 일찍 나와 수험생들과 군복을 입고 들어서는 장병들을 안아주며 격려. <화천>

강원도민일보

2023 11 17 ()

11

수능 이모저모

◇...수능이 치러진 16일 강일여고 정문에서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고사장으로 입실. 코로나19 이전처럼 열띤 응원전을 펼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각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 등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 학생들에게 초콜릿을 전달하고 하이파이브하는 등 소소하게 응원하는 모습을 연출. 정태범 강릉교육장과 김용래 도의원은 강릉제일고와 강일여고를 순차 방문해 수험생들을 응원. 김철한(31·명륜고), 유영인(43·제일고) 교사는 “학생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발휘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며 “수능 후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니 긴장하지 말고 별탈 없이 시험을 치렀으면 한다”고 언급. 고사장 주변에는 ‘찍어도 정답’, ‘보석처럼 빛나는 너를 응원해’, ‘우리는 알아 너희들의 노력을! 그리고 믿어, 수능대박!’ 등의 응원문구 플래카드가 곳곳에 내걸리기도.

2023 11 16 ()

江原日報**[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은 17일 오후 5시30분 고성 르네블루바이워커힐에서 열리는 제16회 고성군 보육교직원 직무향상 워크숍에 참석.

엄윤순(인제) 도의회 농림수산부위원장은 18일 오전 11시 인제체육관에서 열리는 2023년 인제군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축제에 참석.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17일 오전 10시 속초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대한적십자사 재난구호 종합훈련에 참석.

윤길로(영월) 도의원은 17일 오후 2시30분 영월 E-아르떼뮤지엄(친환경에너지센터)에서 열리는 개관식에 참석.

전찬성(원주) 도의원은 18일 오전 10시 구룡사 한울카페 앞 무대광장에서 열리는 2023년 황장목숲길 걷기 축제에 참석.

홍성기(홍천) 도의원은 18일 오후 4시 홍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무궁화 홍천큰물 음악극에 참석.

2023 11 16 ()

江原日報**[동정] 원제용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원제용(원주) 강원특별자치도 의원은 17일 오후 2시 호텔인터불고 원주 1층 루비홀에서 열리는 2023년 강원청소년자원봉사 및 우수활동대회 시상식에 참석.

2023 11 16 ()

江原日報**[동정]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은 17일 오후 5시30분 고성 르네블루바이워커힐에서 열리는 제16회 고성군 보육교직원 직무향상 워크숍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 11 17 ()

강원도민일보

2023 11 17 ()

16

블루바이워커힐에서
열리는 제16회 고성군
보육교직원 직무향상
워크숍에 참석한다.



김용복(고
성) 도의
회 농림수
산위원장
은 17일 오
후 5시 30분 고성 르네



심재섭 영월군의장
(왼쪽)·윤길로 (영

강원도민일보

2023 11 17 ()

16



강정호(속
초) 도의
원은 17일
오전 10시
속초 청소

년수련관 실내체육관
에서 열리는 대한적십
자사 재난구호 종합훈
련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1 17 ()

02

AI도 비껴가는 강원? 일자리 대체 안심지역 분류 '역설'

한은 '직업별 AI 노출 지수' 발표
고생산성 산업 대체 가능성 높아

인공지능(AI)으로 사라질 일자리가
강원도만 비껴나갈 것으로 전망됐다.

강원특별자치도내 근로자 대부분이
대면·단순노동에 속한 업종에 근무,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낮은 안심
지역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AI의 역설'이다.

16일 한국은행은 'AI와 노동시장 변
화' 보고서를 발표, 직업별 AI 노출 지
수를 근거로 '고학력·고소득 근로자일

수록 AI에 더 많이 노출돼 있어 대체 위
험이 크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AI 노
출 지수는 현재 AI 기술로 수행할 수 있
는 업무가 해당 직업의 업무에 얼마나
집중돼 있는지를 나타낸 수치다.

AI 노출 지수가 높아 AI 대체 가능성
이 큰 직업으로는 화학공학 기술자, 발
전장치 조작원,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등이 꼽혔다. 반대로 지수가 낮은 직
업으로는 대면 서비스업인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대학교수 및 강사, 상품
대여 종사자 등이 제시됐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올해 상반
기 기준 강원지역 86만 1000명의 근로

자 중 AI 노출 지수 하위권에 속한 도·
소재업(8만 1000명), 음식점 및 주점
업(7만 9000명), 운수 및 창고업(3만
6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
비스업(2만 6000명), 숙박업(2만명),

등의 취업자수가 많았다.

반면 노출 지수가 높은 직군의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00명), 연
구 개발업(3000명) 등은 도내 근로자
가 1만명을 밑돌았다.

한은은 주요 업무의 상당수가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큰 일자리는 약
341만개(전체 일자리의 12%)로 추정

했다. 한은 관계자는 "산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제조업 등
고생산성 산업을 중심으로 AI 노출 지
수가 높게 나타났고 반면 숙박음식업,
예술·스포츠·여가 등 대면 서비스업
은 예상대로 AI 노출 지수가 낮게 측정
됐다"고 밝혔다.

김호석 kimhs86@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11 17 ()

13

인제군 산림탄소 매각 2700만원 수익 창출

군, 인증 흡수량 1648t 거래
3730여만원 추가 수익 예상
전국 지자체 최초 성공 성장세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산림탄소상쇄제도 산림탄소
흡수량 매각에 성공한 인제군이 매
각 1년만에 2700여만원의 수익을 올
렸다.

지난 2014년부터 산림탄소상쇄

제도 별기령 연장과 재조림 사업에
착수한 인제군은 거래형 6곳 1669
ha, 비거래형 2곳 2ha 등 군유림
1671ha를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
소센터에 등록하고 그중 거래형 55
ha에 대한 산림탄소 흡수량을 인증
받았다.

군이 현재까지 인증받은 산림탄
소 흡수량은 총 3909t으로, 이중
1648t을 한국임업진흥원과 민간 탄
소거래 플랫폼인 '팍플'을 통해 매
각, 이달까지 2719만 2000원의 수익

을 올렸다. 현재 산림탄소흡수량의
단가는 t당 1만 6500원으로 남은 보
유잔량 2261t이 모두 매각될 경우
3730만 6500원의 추가 수익이 예상
된다.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투자자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만큼 향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구매에 참여한 기업

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산림경영 사업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기업·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산림조림 등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하고,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흡수량을 사회공헌 등에 활용하거나
자발적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다.
참여유형은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나뉜다.

전교원

강원도민일보

2023 11 17 ()

01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예타조사 장기화 되나

자료보완 지속·중간회의 전무

속보=삼척~강릉 고속화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본지 8월 8일자 1면)가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 지표를 가늠하는 비용 대비 편익(B/C)과 함께 경제성·정책성·낙후도 등을 반영한 종합평가(AHP)를 통한 보완이 시급해졌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사업은 올해 초부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기간은 내년 2월까지다.

기획재정부 훈령은 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12개월로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KDI·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각각 예비타당성조사를 주관·진행한다. 예타 조사 기간이 3개월여 째 남아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KDI는 예타조사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자료 보완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통상 두 차례 정도 진행되는 중간점검 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KDI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8~9월 중간점검을 갖기로 했지만 진행하지 못했다. 과제 기간이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 계획 등 자료를 국토교통부와 주고받고 있다”고 했다.

한편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사업은 삼척역~강릉 안인 일대 45.8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조 3357억원으로 추산된다. 김덕형

江原日報

2023 11 17 ()

05

중·북부 산지 아침까지 최대 7cm ‘대설주의보’

16일 강원특별자치도 중·북부산지에 대설 특보가 발효, 17일 오전까지 때이른 가을눈이 쏟아지겠다.

기상청은 16일 오후 3시30분을 기해 북부산지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예상 적설량은 16일 오후 2시부터 17일 오전 6시까지 3~7cm다. 중부산지에도 16일 오후 6시부터 17일 새벽까지 2~5cm의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면서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됐다.

대설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뉜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신적설(특정 시간에 내려 쌓인 눈)이 5cm 이상 예상될 때, 경보는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쏟아질 것으로 보일 때 내려진다.

17일 영서지역에는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이다. 이날 오전 최저 기온은 횡성 영하 4도, 철원·화천·양구·평창 영하 3도, 춘천·홍천·정선 영하 2도, 영월·인제 영하 1도, 원주 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속 55~90km의 거센 강풍도 몰아치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울 것으로 전망된다. 동해중부전해상에는 17일부터 시속 30~70km의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다.

기상청은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빙판길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시민들은 안전운전에 주의해야 한다”며 “당분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준겸기자 lean@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11 17 ()

/ 19

수능 직후 수험생에 더 배려를

-문예활동 다각적으로 ...우정여행 따른 관광지 안전 철저하게

수험생들이 극도의 긴장 속에 준비해 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5일 치러졌습니다.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치른 시험이어서 고사장 교문 앞에서 학부모와 교사는 물론 재학생들까지 나서서 응원하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강원은 전국 평균 결시율보다 높은 14.32%를 보인 가운데 응급환자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며 평온하게 진행됐습니다.

수능 관련 일정은 오는 20일까지 출제 문항 이의 신청기간에 이어 21일부터 심사를 거쳐 28일 오후 5시 정답이 발표됩니다. 시험 성적 통지는 12월 8일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수능 출제위원회 측은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유념하고 공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설명과 달리 국어와 수학 중심으로 어려웠고, 9월의 모의평가에 비해서도 어려운 것으로 체감할 것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수험생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역량을 다 보여주지 못한 경우가 예상보다 많을 수 있음을 걱정하게 됩니다. 극도로 긴장한 가운데 치르는 시험인데다가 당일 기분 따라 영향을 주기도 하므로 평소하던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 실

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 등 주변에서는 수험생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보듬어야 합니다. 수능 직후의 시간은 수험생들이 그동안 품어온 꿈을 대학 진학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수능 피로감을 덜 수 있도록 지역차원의 문화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열려야 합니다. 교내는 물론 교문 밖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취향에 맞는 행사 및 혜택 등을 통해 억눌렸던 욕구를 건강하게 해소돼야 합니다.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관련 활동 정보를 청소년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길 바랍니다.

또한 관광지가 많은 강원지역에서는 수능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수험생들이 안전사고 없이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도록 사전 조치에 철저해야 합니다. 2018년 12월 서울대성고 3학년생 10명이 여행체험을 위해 강릉의 숙박지에서 잠을 자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무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 1월 동해시의 숙박시설에서도 가스폭발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청소년 우정여행이 늘어나는 시기이므로 세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1 17 ()

/ 19

강원 광역수도권 본격화할 때

-서울 메가시티 구상 속, 지역 생존 전략 절실

총선을 앞두고 '서울 메가시티'가 주요 의제로 부상해 수도권 집중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큼니다. 산업과 문화, 교육,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이 더욱 비대해져 비수도권 공동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영·호남과 충청권도 메가시티를 추진해 '강원도 외톨이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의 비전을 토대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해 강원만의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는 일이 최선이지만, 국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강원도의 광역수도권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경기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서울 메가시티는 이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총 8만 가구 중 6만 5500 가구인 81%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오산·용인·구리 등 5개 지구에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선 구리 토평, 오산 세교, 용인 이동 3개 지구가 추진됩니다. 오산 세교와 용인

이동 신규 택지는 화성~용인~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배후 역할을 하는 반도체 신도시라는 점에서 '신도시 빨대효과'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 메가시티 추진안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지난 13일 '메가시티 충청시대'를 선포,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국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충청권의 연대 이후엔 곧바로 광주·시가 전남·북에 광주·전남·전북 메가시티 구상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재추진 작업도 본격화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운명입니다. 전국적인 메가시티 추진 움직임에서 소외되지 않고, 성장을 견인할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의 비전 중 하나인 '수도권 강원시대'의 조기 실현이 절실합니다. 정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 광역수도권화를 위해 행정력을 쏟아야 합니다. 이는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관광 발전, 인구 확대 등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경제 공동체, 생활 공동체, 관광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2023 11 17 ()

/ 25

江原日報

경제성 중심 '예타' 기준 변경 요구, 일리 있다

홍천군의회에서 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최이경 홍천군의회 부의장은 지난 13일 제34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999년 도입된 예타 조사 대상 기준은 시대의 변화나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 재정·경제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홍천과 같은 인구 소멸 지역은 비용편익률이 낮아 시급한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성만 따지면 홍천과 같은 지역은 소외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더 투자가 집중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심화된다”며 “용문~홍천 철도 유치에 따른 인구 유입, 출퇴근 편의 확대, 기업 유치, 관광객 증가 등의 효과를 감안하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리 있는 말이다.

교통 인프라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의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토대이며 지역의 발전 척도를 가늠하는 핵심 요소다. 철도 개통 효과는 사회 경제적 변화와 자치단체의 정책적인 변수들에 따라 다양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개통 이후 자치단체의 정책 방향, 관광업계의 상품 개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등에 의해 그 과급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간 SOC

시설은 본질적으로 공공성을 담보로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그 기반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건설된다. 국가가 국민 생활의 어려운 정도 등을 감안해 SOC시설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 국가기간 교통망체계는 비록 국가가 계획하고 설계하지만 지방정부가 끈질기게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건의해야 이뤄지는 구조다. 즉,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B/C (Benefit/Cost)로 표현되는 경제성 분석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 상태가 심화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강원특별자치도와 같이 SOC시설 확충이 간절한 지방정부에서는 매번 정부에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강원특별자치도의 SOC사업은 타 지역과의 접근성 향상이나 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문화·관광사업과 연계된 것들로 사업의 타당성 통과가 전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SOC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를 살리는 대책으로도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다. 재원이 부족하고 경기가 침체됐다면서 필요한 SOC 투자까지 중단해 버리면 오히려 경기 회복이 지체되고 세수(稅收) 기반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유념해야 한다.

江原日報

2023 11 17 ()

/ 25

조세 정의 위협하는 '악성 체납', 용납해선 안 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이 지난 15일 공개됐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밝힌 올 1월1일 기준 전국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8,79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은 933명으로 총 4,507억원이다. 과거 명단이 공개되고도 체납액을 아직 내지 않은 경우를 합하면 밀린 지방세는 4조4,263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969억원에 달한다. 이 중 도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1,113명, 총 체납액은 517억8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액 체납까지 모두 합하면 강원지역의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799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강원자

치도의 세수결손액이 4,700억원으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17%가량의 결손이 체납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원주의 법인으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3건, 총 5억3,000만원이다. 개인으로는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는 50대가 춘천시에 납부해야 할 주민세(종합소득) 2억5,000만여원을 체납 중이다.

지방세는 지자체가 그해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걷는 세금이다.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포함된다. 지방세는 지자체 재정의 근간이다. 현재 사는 동네의 도로나 하수도 등 주민 생활편의나 복지 증진, 공무원 급여 등에 사용된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은 곧바로 지

자체 살림을 어렵게 하며 조세 정의에도 어긋난다. 성실히 세금을 내는 대다수 주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비양심적인 행위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해당 명단을 공개하고 재산 추적 등 세금 징수에 매달리고 있지만 체납액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세의 소멸 시효는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5년이다.

시효가 만료된 이후에는 체납자의 재산·소득이 발견되더라도 징수할 수 없다. 다만 체납상태로 5년에서 10년이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 만료가 성립되는

올 1월1일 기준 도 지방세 체납액 799억원

시효 5~10년, '버티면 된다' 확산될 수 있어

은닉 재산 추적 등으로 끝까지 세금 징수해야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으로 지방세 소멸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에는 소극적이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버티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악성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에 대한 대책 강화도 요구된다. 양심불량 체납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막고, 끝까지 추적해 밀린 세금을 반드시 받아야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 생계형 체납자 등에게는 징수 유예 등이 필요하지만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벌 백계의 강경 대응으로 끝까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